제 1분임 토의결과

과제명	논의사항
건축제도 및 건축규제, 행정절차 완화 등 개선방안	**건축행정 간소화** ㅇ **건축심의 방법 개선** - 종이로 제출하는 건축심의 제도를 인터넷 접수 및 모니터를 활용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제도 개선 * 도면제출 비용절감 및 시간적 절약(제주도) ㅇ **건축심의 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** - 건축물의 종류별, 규모별 풀 작성/운용 ㅇ **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 필요** - 중앙부처에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적용 - 심위위원 개인의 주관적 편파적 의견 지양으로 공정성 확보

과제명	논의사항
건축제도 및 건축규제, 행정절차 완화 등 개선방안	**민원 서비스의 내실화** ○ **민원상담을 전담 제도 도입** -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건축행정 민원제도 빠른 처리 * 오사카시 시행 중 ○ **건축허가(사용검사) 신청시 코디네이터 활용 제도 도입** - 어려운 건축행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

과제명	논의사항
건축제도 및 건축규제, 행정절차 완화 등 개선방안	**합리적 건축 기준 마련** **ㅇ 재해 위험지구에 건축제한 및 구조 등 강화기준 마련** - 재해 위험지구 정의 및 용어정리, 지정권자 범위 등 필요 **ㅇ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해 예치금 한도 및 규모 기준 개선** - 예치금 : 1% →3% 이상, 규모 : 1000m2→500m2 **ㅇ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기준 완화** - 20세대 기준 -> 50세대기준 * 소규모 주택사업 활성화로 주택보급확대, 주거문제 해결 **ㅇ 고시원의 취사(씽크대 설치)행위가 가능하도록 양성화** -고시원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시정 어려움 * 건축물 670만동 중 고시원 1만동(5천동 서울시)

제2분임 토의 결과

과제명	논의사항
건축설계산업 발전 기반 구축	-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・시행 - 건축설계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* 신진건축사 발굴(설계공모 시범 운영) * 실무 교육 프로그램 마련
건축설계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	- 디자인 능력 강화를 위한 기획업무 선 발주 의무화 *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에 관련 내용 포함 -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계선 * 설계공모 보편적 시행 * 공모제출 도서 등 간소화

제2분임 토의 결과

과제명	논의사항
건축설계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	-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활성화 - 건축 교육제도 개선 및 우수인력 수급방안 마련 * 건축교육제도 개선, 국내외 건축 시장 분석

제 3 분임 토의결과

과제명	논의사항
중소도시의 기존도심 재생 방안	● 도시재생의 의미 -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다시 살린다는 개념 -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부심, 정주여건, 소득을 함께 개선하며, 기존의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까를 고민해야 함 ● 도시재생 방향 - 고층·고밀 아파트 위주 정비는 오히려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옴 -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재생이 이루어져 함 - 기존 원주민 및 커뮤니티를 위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하며, 소규모단위의 점진적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● 주거환경개선사업 - 2단계 국고지원(~2013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- 50만 기준으로 국토부, 농림부로 부처가 다른데 일원화가 필요 -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지원 비율 차등화가 필요

과제명	논의사항
	● 공가, 폐가 정비 - 대구시의 사례는 매우 좋은 사례이며, 국가적 지원이 필요 - 공가, 폐가 정비에 따른 주변 주거환경개선의 효과가 매우 높음 - 폐·공가에 대해 농촌은 지원이 있으나, 도시지역의 지원이 필요 - 철거비, 폐기물처리 등 지원, 세제혜택 등을 통한 활성화 필요 ● 법제도적 정비 - 관련 법 등이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여건의 고려한 전환이 필요 - 국토부, 지경부, 문광부 등 중앙부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 - 서울, 부산 외는 정비기금 등 재원이 부족하며,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과 같은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

과제명	논의사항
친환경 건축행정 추진 방안	**(지자체의 현실)** - 친환경 부문에 관한 사업은 환경관련부서가 주로 진행, 인증기준 등이 매우 복잡하여 담당자의 내실있는 검토에 한계 -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는 사업들간의 연계 및 조정 체계 필요 예) 기존주택 개보수 사업 (지붕슬레이트교체사업에 단열재 보완을 포함하는 등) - 국가에서 2020년 대비 30% 절감하여야 한다는 에너지절감 목표량은 제시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현재의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총량 파악에 한계 - 신규조성 건축물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운영 마련 필요 * 기존건축물 유형화를 통한 에너지성능개선 기술용역 추진 -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한 해피하우스 (단독주택주거지원) 역할로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의 역할 검토

과제명	논의사항
친환경 건축행정 추진 방안	**(중앙과 지자체 역할)** - "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" 제정 이후 지자체 확산 및 적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방안 마련 필요 - 초기단계에는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**시범사업 추진** 및 세금감면 혜택, **예산지원** 필요 * 대부분 지자체 재정이 열악, 더욱이 건축과는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 - 시범사업 종료 이후,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* 태양광사업의 경우, 작년까지 50% 보조한 이후 자발적인 참여는 저조 O 현재, 중앙부처의 예산, 조직인력 지원방안 이외에 우선적으로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정책기획 및 추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음 * 대전시 : 녹색건축부문과 관련 지역소재 전문연구기관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

과제명	논의사항
친환경 건축행정 추진 방안	**(친환경건축물인증)** - 친환경에 대한 의미가 광범위하여 공유된 개념정립 및 확산필요 *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관련분야 **전문가 양**성, 친환경에 대한 **교육 및 홍보** -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"초기단계 투자분은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용 절감 가능" * 현재는 건축심의 시 친환경건축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정도임 - 장기적으로 친환경등급의 평가요소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 * 초기단계에 선도적으로 마련되었던 제도로 많은 사항이 반영 (유니버설디자인, 조경관련 규정 등)

제 5 분임 토의결과

과제명	논의사항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표거리 조성방안	□ 거리선정 ㅇ지역 대표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정자체가 중요(관광객 유치, 다양한 콘텐츠<먹거리, 역사성 등> 고려) *지역의 심볼로드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리 □ 추진방향 ㅇ국고지원 확대 필요 -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1-2개 집중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확산(성공사례 전파) ㅇ지역 대표거리의 대규모.인위적 개발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을 유도하는게 중요(세제 혜택 병행 등) - 또한,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발방식 유도

과제명	논의사항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표거리 조성 방안	ㅇ 스토리텔링 및 홍보마케팅, 이벤트를 활용한 타지역과의 차별화 유도(대전 정려의 길 등) ㅇ 근대건축물 등에 가치인식 제고 및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 우수한 건축자산관련 공공정보 제공서비스(DB)를 구축중으로 향후, 지역대표거리 조성에 활용 (국토부)